

김영록 “전남 국립의대 신속 신설을”… 정청래 “적극 협력”

국회서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김 지사, 정책·예산 20건 건의
정청래 대표 “호남고속철 운행 확대 등 호남에 표시나는 지원 필요”

전남도가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신속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과 무안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특별법에 국내 1호 RE100 시범단지 조성하고 기업 투자 촉진에 관한 파격적 전기요금(50% 이상 할인)된 RE100 국가산업단지 요금제 별도 신설) 제도 신설 등 법률 제·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권항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주철원 의원을 비롯, 박지원·이개호·신정훈·김원아·조계원·문금주·김문수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남도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실·국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10건의 정책건의와 5건의 법률건의, 10건의 국고건의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입법 활동, 제도 개선 등에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10건의 정책 건의 사업으로 ▲전남도 통합대 국립의대 신속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술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매가 프로젝트 추진 ▲광양·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아시아 태평양 해상 품력 허브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2028 COP33 여

수 유치 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전남도는 또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특별 반영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비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으로 ▲전남 사회간접자본(SOC) 국고 지원 ▲국립 김산 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AI 첨단 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 시설 구축 등을 꼽고 증액을 요청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998억원) 사업 등 전남 SOC 계속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34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전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등의 예산 지원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남 국립의대'가 오는 202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하가권 등 맞춤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 지역 위원회별 10개의 건의사업을 마련,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을 위해서는 호남에 표시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광주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및 객차량 운행횟수 확대 등 개선, 목포·순천 통합의과대학 신설 등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청래 “호남 사위가 호남 잘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남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가 인사말에

서 정 대표를 “호남의 사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영 손실 민사책임 강화

당정, 경제형벌 규정 110개 개선 추진…증거개시 등 도입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

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권 의원은 “이들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최현수 개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재선출

내년 지방선거 전 조직 정비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광주지역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개혁신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당원 투표 직선제로 치러진 사·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최현수 위원장이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최 위원장은 당선 직후 “광주 전 지역에서 지방의회 출마자를 배출해 당선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장 선거에도 개혁신당 후보를 내세우고 담대한 결심으로 철저히 준비



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을 광주제2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역위원장을 넘어 광주 정치권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힌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다.

특히 “건설·하청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여차별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 ‘지귀연 술 접대 의혹’ 결론 보류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톱살통 접대 의혹’을 자제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

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와 감사위 심의 결론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변호사 2명과 교대역 인근 횡집에서 저녁을 하고, 이

후 A 변호사의 제안으로 인근 술집으로 이동했다.

1차 식사비 15만5천원은 지 부장판사가 냈으며, 2차 업소에서는 술 한잔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 여성 종업원과의 동석 사실은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수사에 따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수사기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